

## 주제발표 2. 노동자 정치세력화와 민주노총의 대선 방침

양경규 / 민주노총 정치위원회 위원장

민

주노총은 6월 19일 중앙위원회와 7월 말에 있을 대의원대회에서 “노동자의 정치세력화와 97년 대통령 선거 방침”을 확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조직적으로 결정된 것이 아니라 현재까지 제기되고 토론된 내용임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민주노총은 조직 건설 과정에서 기본적인 정치방침을 확정한 바 있습니다. 그 내용은 98년 지자체 선거에 대비 전출하여 독자적인 정치 영역을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1998~99년 정당을 건설하고 2000년 국회 원내 진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민주노총은 정치세력화의 의미와 방향 그리고 필요성에 대해 폭넓은 공감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이 제기하는 정치세력화의 의미는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정치적 사회적인 영향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노동자의 정치조직이 필요하고 궁극적으로는 집권을 목표로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정치세력화에 대한 이같은 공감대에도 불구하고 노동자의 정치세력화에

대한 목표와 방향, 경로는 아직 충분하게 논의되지 못한 상태이며 생각의 차이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 정치세력화의 필요성

우선 노동자의 정치세력화의 필요성부터 살펴봅시다.

첫 번째로는 현장의 노동운동 탄압, 개악된 노동법의 분쇄와 개정이라는 당면한 노동운동의 요구로부터 제기됩니다. 노동법 개악 이후 자본의 노동자에 대한 포섭·억제·지배는 노골화되고 있습니다. 이는 개별사업장의 문제가 아니라 총노동과 총자본의 문제입니다. 노동법 개정 이후 현장에 불어 닥치고 있는 탄압에 대한 대응은 현실적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둘째, 소위 신보수주의로 규정되는 보수화라는 국내외적인 흐름 속에서 노동운동의 대안 모색이라는 관점에서 새롭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신보수주의는 한국 사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공기업의 민영화, 국가의 간섭 축소라는 이름아래 사회복지의 축소는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이데올로



그간의 정치조직 건설의 모습을 보면 합의의 정신이 얼마나 중요한가 알 수 있습니다. 민중당, 민중의 당, 한국노동당 등 그간의 모습은 실패가 예견된 정당활동이었습니다. 노동자의 정당을 주장하면서도 노동대중 스스로가 참여하지 않은 정당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 하에 전세계적인 공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같은 상황에서 대중운동의 흐름만으로는 안된다는 판단이 듭니다. 지금의 상태에서 운동의 활로가 있는가 제기해 봅니다. 극단적으로 말해 우리운동은 87년 이후 승리와 패배의 과정을 통해 성장해 왔지만 다른 면에서는 87년 이후 계속 자본의 공세에 밀려 위기의 상황까지 도달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현 상황을 불파하기 위해서는 정치세력화의 과제가 미래의 문제가 아니라 당장 실천해야 할 과제로 제기되는 것입니다.

셋째, 이번 총파업투쟁을 통한 노동대중의 자각과 자신감 확보입니다. 이번 투쟁을 통해서 민주노총은 오만과 독선에 가득 찬 김영삼과 신한국당 정권을 처음으로 무를 끊게 하였으며 국민 속에 확실히 푸리내렸습니다. 총파업과 노동법 개정을 거치면서 노동자들은 기존 보수정당의 실체를 똑똑히 인식하였습니다. 어느 정당도 파업에 참가한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려

들지 않았습니다. 이제 노동자들은 현실 정치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자각과 우리가 정치의 주인으로 나서야 할을 깨닫고 있습니다.

넷째, 당면 정치일정의 문제입니다. 97년 대선 이후의 한국 정치의 지형 변화는 엄청나게 달라지게 됩니다. 또한 대선 이후의 98년 지자체 선거, 2000년 국회의원 총선이 있습니다. 21세기를 준비하는 민주노총이 이러한 정치 지향에 능동적으로 개입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이렇듯 정치세력화의 필요성은 노동운동의 본성적인 요구와 함께, 앞에 제기된 이유에서 당면한 과제로 제기되고 있음은 더 이상 강조 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 정치세력화의 방도

문제는 어떻게 정치세력화를 이루어 낼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몇 가지 전제와 조건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민주노총 전체 조합원의 대중적인 합의의 과정입니다. 물론 합의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그간의 정치조직 건설의 모습을 보면 합의의 정신이 얼마나 중요한가 알 수 있습니다. 민중당, 민중의 당, 한국노동당 등 그간의 모습은 실패가 예견된 정당 활동이었습니다. 노동자의 정당을 주장하면서도 노동대중 스스로가 참여하지 않은 정당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87년이후 우리 운동은 대선 방침, 전보정당 건설의 과정에 합의와 단결의 기운을 높이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우리가 최근 극복되어 가고 있습니다. 전국연합도 6월 14일 정치방침을 조직적으로 결의하였고 민주노총도 노력을 하면 대중적인 합의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위원회장으로서 저는 이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둘째, 노동자의 정치세력화는 대단히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며 따라서 언뜻 가장 현안인 것처럼 부각되고 있는 대선 논의는 수위 조절이 필요합니다. 대통령 선거와 관련된 방침의 결정과 관련 사업은 정치세력화라는 장기적인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상에 있는 전술적 지점임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셋째, 노동자의 계급적 입장을 견지하여야 합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쟁의 여지가 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노동자의 정치세력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노동자들만이 아닌 전체 국민들의 지지와 지원

이 필수적입니다. 계급성을 견지한다는 것이 노동자들만의 배타적 이익의 실천이 아니라듯 노동자 정치세력화에 대한 관심 확립과 폭넓은 실천이 필요합니다.

넷째, 대중조직과 정치조직이 분리되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일상적 이해를 대변하는 노동조합과 집권을 목표로 활동하는 정당은 그 위상과 활동원리가 다릅니다. 노동조합과 정당은 독립적이면서 상호 협조하는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다섯째, 민주노총은 정치세력화의 중심이지만 전보정당 건설 사업 전체를 대표하는 것은 아니라는 소박하고 겸손한 태도입니다. 방침을 결정하고 사업을 계획하고 시행함에 있어 민주노총이 어떤 위치에 있는가를 명확히 인식해야 합니다. 즉 민주노총의 방침이 전부인가 부분인가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하며 사업 또한 이러한 관점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정치세력화를 위한 장기적인 방침이든 대선 방침이든 민주노총이 주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중요한 단위일 수는 있으나 전부가 될 수는 없습니다. 한국 사회의 변화를 시장하는 전국연합, 농민, 도시빈민, 청년학생, 양심적 지식인 등 다양한 세력이 정치세력화의 주인인 것입니다.

여섯째,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위한 인적, 물적 자원입니다. 노동자의 정치세력화는 토론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토론과 함께 정치세력화의 인적 물적 토대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누가 이 정당 건설을 주도할 것입니까? 민주노총의 50만 조합원들입니다. 특히 간부들부터

술선수범하여 정치조직 건설에 나서야 합니다.

일곱째, 당면한 임단투 과정에서 투쟁선선을 구축하여야 합니다. 노동대중이 이번 대선을 기점으로 정치 방침을 확정하고 실천하기 위해서는 총파업 이후 현장에 침투하고 있는 자본의 공세에 대한 대립전선을 분명히 하고 투쟁을 통해 돌파하여야 합니다. 이는 97년 임단협 투쟁과정에서 우리 전체가 고민하고 해결하여야 문제입니다.

### 정치세력화 방도와 대선방침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논의되고 있는 세부적인 정치세력화의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의 흐름이 세기되고 있습니다. 기존 정당과의 정치연합 방안과 독자적인 정치조직 건설 방안입니다. 현 정치상황과 노동법 개정투쟁의 과정을 볼 때 한국의 어떤 가상 정당도 노동자의 이익을 대변하지는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대선 문제를 생각할 때 이 문제는 그리 간단하지 않습니다.

97년 대선 방침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 할 수 있습니다. 무슨론(論)으로 구분되는 것은 아니지만 크게 현실을 중시하는 '신중론'과 '참여론'으로, 나아고 참여론은 다시 '우리 후보'를 내는 방안과 기존 정당과의 '정책연합'을 통한 참여로 나뉩니다. 먼저 각 입장을 객관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그 근거를 살펴보겠습니다.

현실을 중시하는 신중론은 첫째 민주노총의 조직 여건 상 인적 물적 지원이 부족

하며 준비가 부족하다는 것, 둘째 87년이후 많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민주노조운동 내부에 기업별 의식이 잔존해 있으며 제대로 된 정치교육을 조직적으로 진행하지 못했다는 점, 세째 한국정치의 파당성과 지역구도는 우리 노동자에게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는 점(바로 비교할 수는 없지만 92년 백기완 후보가 얻었던 표가 얼마나 되었는가라는 것을 냉정히 보아야 한다는 점), 마지막으로 민주노총이 결성된 지 만 2년도 안된 상태에서 무리하게 대선 방침을 확정하게 되면 조직의 분열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이 그 근거입니다.

반면 참여론은 정치세력화의 방안과 대선 방침 수립에 있어 조건과 환경은 부족하지만 조직적 결의와 준비로 돌파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신중론에 대해서는 대선의 적극적인 참여 없이 98년 지자체 선거부터 적극 대응하자는 논리는 사실 정치활동을 몇 년 후로 미루자는 것 아니냐는 문제를 제기합니다. 대선을 통해 정치세력화의 토대를 구축하지 못하면 내년 지자체 선거도 개인적인 실천 이상의 효과를 갖지 못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한 총파업 투쟁을 통해 조합원의 정치적 자각과 자선감은 높아졌으며 이번 시기만큼 정치세력화의 좋은 기회도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민민운동이 그간 보여주었던 선거 시기의 분열은 펼연적인 것은 아니며 전국연합에서 6월 14일 대의원대회를 통해 정치방침을 확정하였듯이 민주노총도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논의를 전개하면 우리하는

조직의 분열은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말씀드렸던 내용이 현재 민주노총에서 논의되고 있는 정치세력화와 대선방침의 논의 내용입니다. 개인적으로 정치위원회를 맡은 지 2주일도 안된 상태이며 사실 여러 조건상 정치위원회를 초기에는 고사하였습니다. 현장의 임단투 투쟁을 비롯한 연맹의 산적한 사업도 많은데 내가 이 일을 꼭 맡아야 하나 고민도 많이 하였습니다. 그러나 전문노련의 동지들이 결단을 내려 저에게 이 중책을 연맹의 일과 함께 병행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당면한 투쟁의 현장에서 우리는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새로운 길을 개척하여야 합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협조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 질의응답 및 토론

**질문** 우선 민주노총은 대선 논의에 있어 선거 강령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까지의 발제 내용을 보면 큰 구상과 포부가 담겨져 있는 것 같지만 '여의주 없는 용(龍)' 같다는 인식을 갖게 됩니다. 민주노총의 선거 강령에는 통일문제, 사회보장제도, 국가보안법 및 안기부법의 침폐, 미국 문제, 교사와 공무원의 노동 3권 보장, 재벌 문제에 대한 명확한 주장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답변** 우선 제기하신 문제를 보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민주노총이 이러한 문제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구성

되는 정치조직 단위에서 논의하고 시급히 제시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정치세력화의 필요성과 절박성을 제시하는 발제문을 들으면 정세 판단이 수세적이라는 느낌을 갖습니다. 앞으로 민주노총에서 어떤 방향으로 논의를 전개 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질문자의 의견과는 달리 저는 현 민주노조운동이 상당한 위기에 처해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견해가 다른 것 같습니다. 민주노총은 6월 중순부터 조직별 순회 간담회를 통해 조직 내부 논의의 활성화와 통일성을 이루고자 합니다. 또한 정치 방침 결정의 근거 자료로 활용하고 조직내 분위기 확산을 위해 6 월말까지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와 같은 기초사업을 토대로 7월 대의원대회에서 정치방침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질문** 정치조직의 건설에 관한 민주노총 내부의 논의과정이 내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어떤 형태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 민주노총 내부의 논의는 무슨 무슨 안들을 놓고 토론에 부치는 방식보다는 최대한 실천적인 형태로 진행될 것입니다. 그리고 기층의 실천이 곧 민주노총의 방침을 결정하는 토대가 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때문에 대중적이 '합의의 정신'이 가장 중요하다고 거듭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